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제도

『월간 한농연』에서는 이번 호부터 각 농업선진국들의 농업보호·농가소득지지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세계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낙후된 우리 농업정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EU 최대의 농업국이며, EU 공동농업정책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CTE)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작년 가을 극심한 쌀대란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쌀값 하락과 판로 미비, 미봉뿐인 정부 수매정책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재작년 처음 도입된 논농업 직접지불제도는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 단가(진흥지역 내 ha당 25만원)와 정부의 정책의지 결여로 농가소득 지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민족의 주곡이자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이었던 쌀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부재와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소득 하락과 부채 급증에 우리 농업인들은 기초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한국 농업의 피폐상과는 달리 프랑스 농업은 유럽연합과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프랑스 농업은 무역수지 흑자 증대에 기여하는 효자 산업으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자국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경제, 사회, 자연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경영계약(Contract Territorial d'Exploitation, 이하 CTE)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토경영계약' (이하 CTE) 제도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에 대한 공공지원을 계약 방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사회가 농업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을 적절히 공급받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CTE를 통해 WTO 협정에 부합하는 '허용보조정책'을 확대하고, 지방농정을 활성화시키며, 농민의 책임의식과 권리를 강화하고, 복잡한 각종 보조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CTE의 재원은 EU의 공동농업정책 계정과 프랑스 정부 자체의 농업예산에서 출자된 CTE 재정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새 농업기본법의 틀 안에서 지자체인 도(道, 데빠트망)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유연성있게 적용되고 있는 특성 또한 주목할 만하다.

CTE 계약은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하는 데

● 표 : CTE 제도의 지원대상 시책

경제·고용 관련	
과 제	목 표
고 용	고용 유지·창출 청년 경영자의 취농 촉진 경양이양 보조
노 동	능력발휘 및 자격취득 노동조건·조직의 개선
품질·안전성	생산물의 품질 개선 식품의 안전성 제고
동물복지	동물복지 개선
경제·자립성	생산자 경제조직 강화 농업·비농업 활동의 다양화 농산물유통경로 개선 부가가치 증대 (생산비절감, 자연자원활용)

환경·국토 관련	
과 제	목 표
물	수질 유지·개선 수원관리의 개선
토 양	침식방지 물리적·화학적·생물적 비옥도 유지
공 기	공기의 질 유지·개선
생물의 다양성	자연공간·생물서식지 보호 다양한 가축품종 유지·증식
경관·문화자원	건축자원의 유지·활용 경관의 질 유지·활용·개선
자연적 위험	토양침식·홍수·화재·눈사태방지·
에너지	에너지 소비량 절감 재생가능 에너지원 이용증진

※ 자료 : [CTE에 관한 지침], 프랑스 농림부

빠트망(Department)과 각종 농업경영체 사이에 체결된다. 각 도의 농업여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 CTE 계약서의 내용은, '경제 및 고용', '환경 및 국토'의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여기서 '경제 및 고용' 부분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을 위한 각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증대 정책을, '환경 및 국토' 부분은 지역의 문화·사회·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표 참조).

농업경영체는 각 도에서 마련한 다양한 CTE 표준계약(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제·고용', '환경·국토'에 대한 조항과 지자체의 농업발전 계획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상세한 영농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농업경영체와 지자체인 도(테파트망)는 CTE 계약을 체결하고, 각 농업경영체는 도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경영투

자 보조금과 연차 지급금(계약기간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CTE 제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역사·문화·자연환경의 보전·계승을 담당하는 농업인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CTE 제도에 의한 농업인과의 계약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비용 지출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국가로부터 농업·농업인이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농정의 사례는, WTO 체제 하 우리나라 농업보조정책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남북통일을 대비한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해, 농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소득지지정책과 농촌진흥정책, 농어촌복지 증진 정책이 조속히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